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2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국내 출판사들 저작권 위반 많아**

1993년 12월 10일자 인쇄신문은 국내 출판사들과 외국 출판사들과의 저작권 취소와 계약 위반이 빈번하다면서 국내 출판사들의 과대 경쟁과 성급함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키고 있다고 전했다. 인쇄신문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의 20~30%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파기가 자주 발생되었으며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계약을 하고 나중에 한국에서의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쇄신문은 출판계에서도 국내 출판사가 외국의 출판사나 저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인쇄사 이전 추진에 업체들 반발**

서울시의 한 구청이 추진한 도시개발계획이 인쇄인들의 생존권과 대립되면서 인쇄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93년 12월 10일자 인쇄신문은 서울용산구청이 문배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인쇄공장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인쇄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삼각지로터리 부근 문배동 일대의 인쇄공장들을 도심부적격 시설로 분류, 시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근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문배동 일대의 3백여 인쇄사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절대 이전 불가’를 천명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인쇄신문은 이니셜을 이용해 당시 이 지역 인쇄업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H인쇄사 K대표는 “인현동에서 20년간 임대료를

내며 인쇄업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곳 문배동에 건물을 마련해 입주했다”고 밝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겨우 인쇄사로서의 틀을 갖췄는데 구청측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M인쇄사 L대표는 “최근 3~4년 동안 약 50여개 인쇄사가 집중적으로 문배동 일대로 이전해 왔으며 현재도 이곳으로 이전해 오려는 인쇄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쇄사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전에 앞서 인쇄단지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쇄신문은 구청측이 추진 계획은 6~7년 후에 실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인쇄사들의 입장과 상반됨에 따라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심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 **저급지 재고 ‘골치 아프네’**

1975년 제지업계는 늘어가는 중질지와 신문용지의 재고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1975년 12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백상지, 판지 등 다른 종들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재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중질지와 신문용지는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떨어져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보가 인용한 1975년 8월말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삼조 제지를 비롯한 5개 신문용지 메이커의 생산실적은 10만7백98톤으로 1974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 늘었고 중질지의 경우는 2만3천2백9톤으로 1974년 같은 기간의 2만53톤에 비해 15.7%를 더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오히려 지난해 수준보다 떨어졌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용지의 경우 출하량은 9만1817톤으로 1974년 같은 기간의 9만6200톤에 비해 4.6%



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종질지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보는 이같은 원인이 정부의 고급지 사용억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즉 정부의 저급지 사용권장정책에 따라 이에 대한 생산을 늘여온 제지업계로서는 저급지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시보는 제지업계가 정부의 펄프도입에 따른 외화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맞춰 그동안 5만여톤을 국산펄프 및 고지로 대체, 그만큼의 외화절약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질이 좋지 않은 종이를 사용했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 한글·한자 인쇄 컴퓨터처리 현실로

국내 출판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글·한자 인쇄의 컴퓨터 처리화가 실현됐다. 1974년 12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1975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특허속보 등 각종 간행물의 편집, 조판 등 전인쇄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키로 하고 약28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일본에 기계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KORSTIC의 설명에 의하면 KORSTIC는 매년 들어나는 각종 과학기술정보자료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정보처리업무의 기계화를 단행키로 했다. 기계화의 대상은 수치정보처리가 아닌 한글, 한자 등 언어정보의 컴퓨터처리화에 주안을 두었으며, 도입기계 종류는 ▲한글, 한자, 일본어, 영어 등 각종문자를 비롯한 각종 부호, 숫자 등이 새겨진 건반입력장치 ▲자기테이프변환장치 ▲문자기억장치 ▲조판장치 ▲교정장치 ▲부속장치 등이었다.

KORSTIC에서 설치를 추진한 한글·한자어 컴퓨터의 인쇄과정은 영어, 한글, 한자는 물론 각종부호, 숫자들이 들어있는 어

떠한 원고, 문장이든 이를 컴퓨터에 장치된 건반입력장치에 넣으면 자기테이프의 변환장치를 거쳐 편집과 조판도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한번 입력된 원고는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력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인쇄과정에서 활자의 형태(명조, 고딕체 등)와 호수(특호, 1호, 1호 등)까지 명령하는대로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 원료 확보난에 잉크 제한 공급 우려

국내 잉크제조업계가 원료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1973년 12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국내 인쇄잉크 생산업계가 안료생산의 공해규제로 인한 선진국의 수출제한과 석유 파동으로 유료, 용제등의 구매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보에 따르면 D사에서는 원료구독난에 대비, H사장이 직접 서구 및 미주지역으로 원료를 구입하러 나섰으며, J사의 C사장도 일본으로 건너가서 원료구매 접촉을 벌였지만, 예상외로 확보가 어려워 당초구매 계획 분량에 크게 못미치는 계약을 맺고 돌아왔다. 이밖에 다른 잉크제조사에서도 원료확보를 위해 해외로 구매단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얼마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시보는 전했다.

원료 및 용제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일부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잉크를 제한공급이 실시 되기도 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시보는 세계적인 자원부족에 이은 석유류 파동 때문에 미국, 일본, 서구 등에서 조달하던 원료, 용제, 수지 등의 수입 창구가 막히게 되어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